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및 One-stop 서비스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국무회의에서 확정 -

(산업자원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배순훈 위원장)와 산업자원부(윤진식 장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과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에 산자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에는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 세제·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과 외국 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투자유치활동의 전개방안, 그리고,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기관명도 「Invest KOREA」로 바꾸는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국무회의 및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의 잠재투자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또한 이번 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환경 개선

먼저 세제 및 입지지원 등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새로 도입하여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생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그 개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후 연차별 「경영환경 개선계획」 및 「외국인 생활환경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주한 외국기업인이 상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학교 확충문제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One-stop 서비스 개선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나라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에 기능이 분산되어 투자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을 제기하여 왔으며,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Invest Korea」가 지정한 PM(Project Manager)이 한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투자가는 PM 한 명만을 상대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확대 개편 ⇒「Invest KOREA」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조직 및 기능을 확대·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그 명칭은 대외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Invest KOREA」로 바꾸는 한편, KOTRA사장이 대표를 맡고, 부사장급 단장을 새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Invest KOREA」의 단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가로 채용하되, 국제공모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토록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필요한 민간전문가도 증원하며, 종합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각 부처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Invest KOREA」는 투자유치 및 지원의 중심기구로서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및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각 프로젝트별로 PM을 지정하여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전담하게 된다.

범 정부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앞장서 이끌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요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CEO를 직접 만나며, 일년에 두 번씩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 「Invest KOREA」 직원 등 투자유치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의 대책보고에 앞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보고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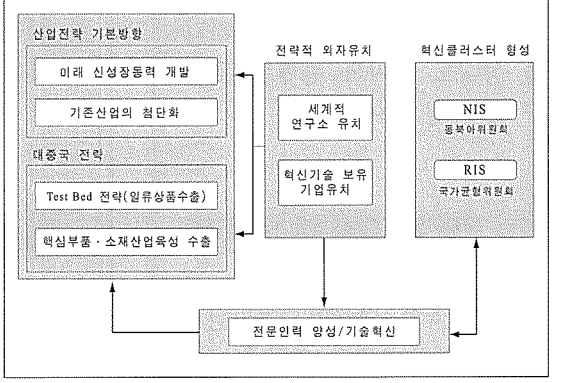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가 외환안정·고용창출·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나, FDI(외국인직접투자) 도입량이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유치전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외자유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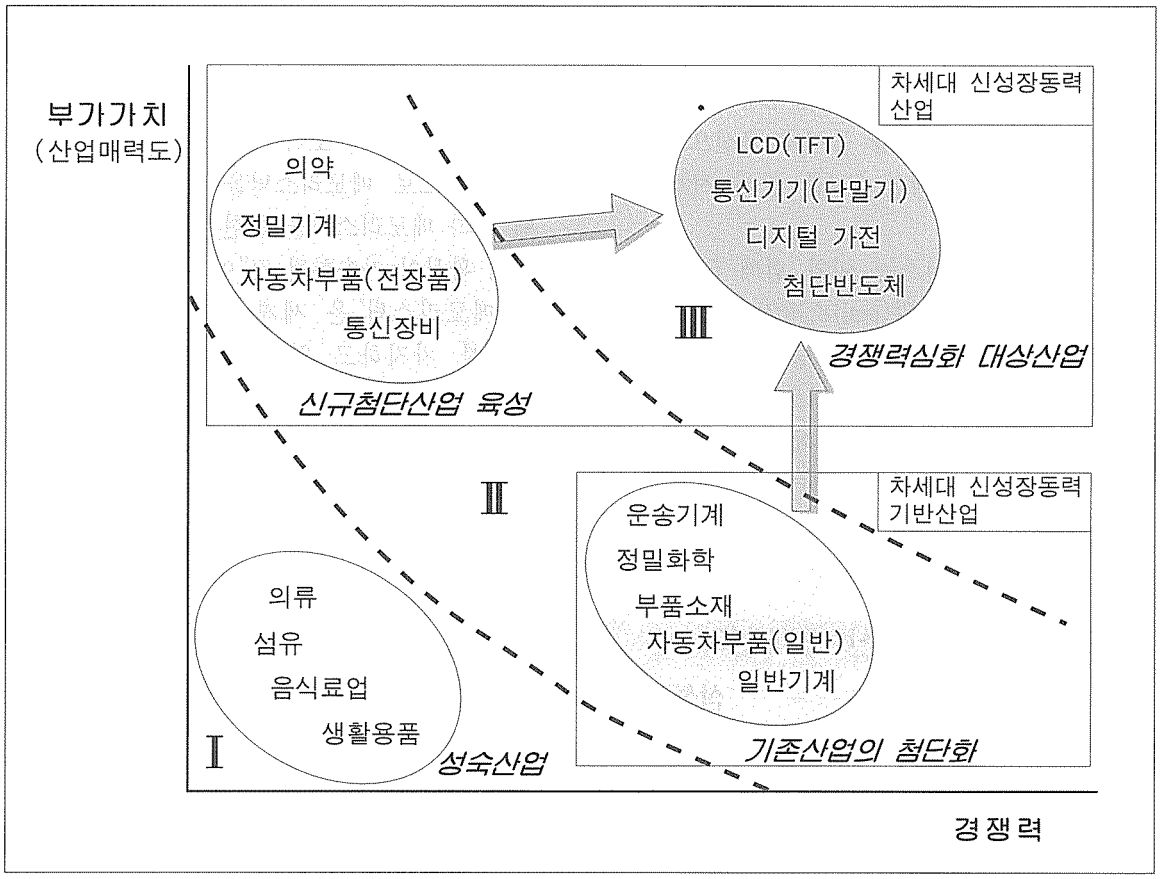
위원회는 우리의 투자유치환경이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 투자경기의 위축 및 중국의 강한 흡인력, 내부적으로는 국내투자 위주형 경제구조 및 주요 투자결정 요인별 열세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투자수준을 향상시키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개발·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투자환경요소를 요인별 성격에 따라 기간별로 개선하되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율 인하, Cash Grant 도입 등 투자인센티브 정비, 투자관련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고, 중장기과제 중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제개방화 등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요인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아일랜드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것을 건의하였다.

위원회는 전략적 외국인투자의 방향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산업의 발전정도와 유형에 따른 외자유치전략 및 대중국전략을 제시하고,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개발 및 기존산업 첨단화 등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규 첨단산업(의약,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등)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운송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의 첨단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수단을 보강하며, 동 분야에 관련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기술인력 양성, 기술혁신을 유도할 외자를 중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전략〉



〈산업의 발전정도와 유형에 따른 외자유치전략〉

대 상	정 의	유 치 전 략
그룹 I	성숙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투유치 대상 분야	• 고용창출, 지역개발 연계 인센티브 • 지자체, 지역기업 중심 해외IR
그룹 II	첨단산업 신규개발, 기존 산업 첨단화를 위해 외투 기업의 선진기술 이전이 필요한 분야	• 기술이전, R&D지원 연계 인센티브 • 유럽의 선진 기계·부품소재기술이전을 위한 유럽기업 대상 해외 IR • 외투기업에 대한 부품조달정보 제공
그룹 III	일정수준의 경쟁력이 확보 되었지만 기능고부가가치화 위해 외자유치 필요분야	• 기존사업의기능심화 유도(생산→R&D 센터) • 인센티브 강화보다는 공격적 해외 IR 실행